2021
연구보고서(수시과제) 7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여성활용과 여성고용서비스 향후과제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21 연구보고서(수시과제)-7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여성활용과 여성고용서비스 향후과제

저 자 정성미

연구진 연구책임자 : 정 성 미 (본원 부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이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정성미(202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여성활용과 여성고용서비스 향후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 연구를 통해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정책 Think-Tank이다.

www.kwdi.re.kr KO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간사

2000년 이후 경제 및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근로빈곤 문제가 대두되고 사회보호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보호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소득과 취업 지원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2021년 1월 시행하였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원이 목적이며 그중에서도 여성은 특히 빈곤율이 높고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 취약한 여성에게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연구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제도를 신청한 여성 수혜자를 분석하고 현재 여성 고용서비스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전문상담사의 역할이 중요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 안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애쓰신 연구진과 연구과정에 귀중한 자문을 아끼지 않으신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1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문유경

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요약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및 수급에 여성비중이 더 높음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 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어 옴. 이후 참여자 확대를 위해 재산 및 소득요건이나 취업경험과 관련해 청년층에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7월 1일에 법률이 개정됨.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대상으로 소득 및 가구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을 충족하면 취업지원 서비스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6개월)을 지급하는 Ⅰ유형과 취업취약성이 높은 저소득층, 결혼이민자나 북한이탈주민 등 특정 계층의 구직자에게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정비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나누어 운영함.
- 이때 수급자에게는 상담을 통해 전문 취업상담사와 함께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구직활동의 의무를 부여함. 또한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여 구직활동의무 불이행 시 수당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2021년 11월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여성 참여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지원자와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고, 특히 지원자가 가장 많은 Ⅰ유형 요건심사형의 경우 여성의 73.8%가 핵심연령층(35~49세)으로 대다수가 몰려있는 상황임.

- 또한 선발형에서도 여성의 참여 및 수급비중이 높고, 35~49세가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어 경력단절 여성 특화 공공고용서비스가 필요함.

www.kwdi.re.kr KO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라 저소득층 여성고용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됨

○ 직업상담기능이 강조된 전문상담사 역할의 중요성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여성고용서비스 지원기관으로서의 새일센터의 역할이 중요함.

- 특히 경력단절여성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특화된 상담 및 취업지원 서비스의 기능을 갖춘 새일센터는 여성 특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강점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여성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지에 맞는 여성 특화 고용서비스의 체계화를 위해 다음의 개선방안이 필요함.

- 새일센터로 연계되는 대상자를 설정하는 기준 마련 및 고용센터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고정적인 협의체 운영
- 취업활동계획(IAP)을 완료한 대상자에게 고용서비스만 제공하는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일센터 전담자에게 가급적 많은 참여자의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
- 새일센터 전담자의 행정전산망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새일센터 계정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계정 분리 사용의 어려움 해소하여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 고용센터를 비롯한 타 기관과 동일한 인센티브 및 성과체계 마련

연구성과목록 주제분류: 노동·고용
주제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고용서비스

www.kwdi.re.kr KO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Ⅱ.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실태와 여성 참여 현황 ····· 7

1.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배경 ····· 9
2.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경과 ····· 12
3.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 참여 실태 ····· 19
4. 소결 ····· 26

Ⅲ. 새일센터의 국민취업제도 운영과 향후과제 ····· 29

1.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여성 고용서비스의 역할 ····· 31
2. 새일센터 참여현황 및 문제점 ····· 33
   가. 새일센터 참여현황과 역할 ····· 33
   나. 연계·협업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 ····· 39
3.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새일센터의 향후 과제 ····· 45

참고문헌 ····· 49

Abstract ····· 51

www.kwdi.re.kr KO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표 목 차

〈표 Ⅱ-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2021년 1월 기준) ····· 13
〈표 Ⅱ-2〉 취업의지와 능력 정도에 따른 유형별 취업지원 방안 ····· 14
〈표 Ⅱ-3〉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요건(2021년 10월 기준) ····· 16
〈표 Ⅱ-4〉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규모 ····· 18
〈표 Ⅱ-5〉 유형별 신청자 수 및 유형 비중 ····· 20
〈표 Ⅱ-6〉 유형별 수급자 수 및 여성 비율 ····· 21
〈표 Ⅱ-7〉 성별·연령별 수급자 비중 ····· 24
〈표 Ⅱ-8〉 성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 ····· 25
〈표 Ⅲ-1〉 수급자격 및 배정 절차 ····· 36
〈표 Ⅲ-2〉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새일센터 ····· 37
〈표 Ⅲ-3〉 새일센터와 연계된 고용센터 분포 ····· 38
〈표 Ⅲ-4〉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새일센터의 근무형태 ····· 39
〈표 Ⅲ-5〉 연계 건수 부족함 여부 ····· 40
〈표 Ⅱ-6〉 수행인력부족(내부 행정업무 과다함) ····· 42
〈표 Ⅱ-7〉 연계 업무 절차의 불명확 ····· 43
〈표 Ⅱ-8〉 국민취업시스템 어려움 ····· 4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www.kwdi.re.kr

그 림 목 차

[그림 Ⅱ-1]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지향방향 ····· 15
[그림 Ⅱ-2] 성별·유형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인정률 ····· 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www.kwdi.re.kr/www.kwdi.re.kr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 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됨.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며 소득기반으로 Ⅰ유형과 Ⅱ유형을 나누어 구직촉진수당(50만 원씩 6개월, 총 300만 원 지급)을 지급해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수급자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
- 수급자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직활동의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함. 이때 구직활동의무 불이행 시 수당지급을 제한(의무 불이행 시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부지급하고, 3회 이상 반복되면 수급권 소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2021년 처음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월 1일 제도 시행 이후 509천 명이 참여를 신청했고 423천 명이 취약계층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음(보도자료 2022.1.5.).[1)]

- 제도설계 당시 지원규모를 단계적 상향하여 22년 60만 명을 지원하려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2.1.5.), "시행 2년째 맞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확실히 안착시키고 성과를 내겠습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138, 2022.2.4 인출)

www.kwdi.re.kr KO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했으나, 2021년 6월 기준 기존 지원규모를 넘는 64만 명(Ⅰ유형 요건심사형 25만 명, 선발형 20만 명, Ⅱ유형 19만 명)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지원이 목적이며 그중에서도 여성은 특히 빈곤율이 높고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취약한 여성에게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오은진 외(2019)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적용받는 잠재적 대상자 중 여성의 규모를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 전체 대상자 추정치의 약 50.8~54.8%가 여성으로 추계됨(오은진 외, 2019: 26~29).
- 특히 중위소득 기준을 50%에서 60%로 확대하거나 취업기준을 완화할 경우 여성이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기준의 경계를 넓힐수록 여성 대상자가 많아지는 것을 확인함.
- 그러나 현재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층 중심으로의 제도개선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 중 여성의 참여수준이나 특성에 대한 분석이 없어 취업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제도개선의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참여자 확대를 위해 재산 및 소득요건이나 취업경험과 관련해 청년층에게 요건완화와 관련한 법률개정(7.1) 등이 신속하게 진행 중에 있는 반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논의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먼저 2021년 하반기부터 다음의 제도개선이 적용됨. 먼저 청년의 재산요건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이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도 취업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
- 둘째, 소득요건의 경우 기존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재산요건의 경우 기존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함.

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셋째, 영세자영업자의 참여요건을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함.
- 이러한 제도개선에 여성이 어느 정도 적용받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또한 여성 고용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전달체계가 여성가족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자체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이용하는 여성들에게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구직자의 상당수가 새일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 이외의 고용서비스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전달체계에 여성 고용서비스의 참여수준 및 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새일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 특성 분석을 통해 향후 여성 특화서비스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함.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이후 제도개선이 빠르게 진행 중인 가운데 경력단절여성에 관한 논의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본 연구는 제도시행 이후 신청자 및 참여자의 성별 및 특특성 분석을 통해 여성 대상자의 참여정도를 살펴보고, 새일센터의 역할과 문제점을 진단한 후 제도개선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제2장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추진배경과 제도의 도입 경과를 살펴보고, 2021년 운영된 실태를 고용노동부의 행정DB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여성의 참여 현황을 살펴봄. 특히 제도의 참여와 수급에 있어

www.kwdi.re.kr KO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연령별로 차이를 보이는지에 주목함.

- 제3장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라 여성 특화된 고용서비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새일센터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 현황과 역할 및 문제점을 확인함. 특히 새일센터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연계협업 현황 및 문제점을 전수조사한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새일센터가 취업지원서비스를 하는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www.kwdi.re.kr

II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실태와 여성 참여 현황

1.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배경 9
2.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경과 12
3.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 참여 실태 19
4. 소결 26

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Ⅱ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실태와 여성 참여 현황

1.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배경

○ 외환위기 이후 실업 및 고용불안정의 증가로 일할 능력이 있거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겪는 근로빈곤층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에는 각각 사각지대가 발생함.

-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제도는 1차 고용안전망의 역할을 하며 빠르게 확대되어 근로자의 보호체계로 자리잡음. 그러나 고용보험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어 영세자영업,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가입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취업자가 절반 이상으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음.
- 일을 하고 있음에도 실업과 비경제활동을 반복하며 빈곤을 겪는 근로빈곤층이 주로 속한 일자리는 그 특성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쉽지 않고, 가입한다 하더라도 급여 수급요건을 만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큼. 따라서 실업을 빈번하게 경험하고 실업기간 동안의 소득 감소는 근로빈곤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게 함.
- 특히 여성은 불안정한 일자리 비중이 매우 높은 동시에 낮은 노동소득과 연관되어 근로빈곤 문제에 있어 더욱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가구 중위소득 60% 미만인 빈곤가구는 여성 가구주 가구 중 절반 이상(51.6%)으로 남성 가구주 가구(17.9%)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김종숙 외, 2012: 49) 가구주일 경우 근로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함.
- 또한 2000년 이후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구직경험이 있는

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기능이 매우 약하며, 수급자 중 근로빈곤층은 20% 수준에 불과함.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연계가 제한적임(이병희, 2018: 43).

○ 2000년 이후 이와 같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보호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고용지원서비스 및 소득보장제도 확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09년 통합형 취업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제도[2]가 신설됨.

-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청년 등 구직 빈곤층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가 2009년 최초의 정책으로 출발함. 취성패는 구직능력이 낮은 저소득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고용보조금 등의 정책을 스스로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전담 상담사의 사례관리에 기초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시작함. 2009년 저소득층 1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취업취약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2018년 31만 명으로 확대됨. 취성패는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을 통한 서비스 제공, 적극노동시장 프로그램과 취업

2) 만 18~69세 저소득 구직자 및 미취업 청·장년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 취업역량·직업심리 검사,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IAP) 수립(1단계) → 직업훈련, 일 경험, 해외취업 등 직업능력 향상 과정 참여(2단계) → 취업 알선, 이력서·면접 상담 등 구직기술 향상, 동행 면접 등(3단계)'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단계별 취업지원 과정과 구직 촉진을 위한 수당을 지원함.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9.5.23.), "취업성공패키지 10년, 그간의 공과", 2022.2.4 인출)

구분	1단계 (상담·진단)	2단계(직업능력향상)	3단계(취업알선)
패키지 I	• 3주~1개월 • 참여수당 최대 25만 원	• 최장 8개월 • 훈련비 300만 원 (내일배움카드, 자부담 최대 10%) • 참여수당 최대40만 원(6개월)	• 최장 3개월 • 취업성공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30만 원(최대 3개월)
패키지 II	• 1주~1개월 • 참여수당 최대 20만 원	• 최장 8개월 • 훈련비 200만 원 (내일배움카드, 자부담 5~70%) • 참여수당 최대40만 원(6개월)	• 최장 3개월

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원서비스의 결합, 취업의욕을 높이고 근속을 높이는 유인으로서 취업성공수당 제공, 성과 중심의 민간위탁 관리와 육성 등 통합형 취업지원서비스의 대표적인 모델로 발전함.[3)]

- 그러나 취성패 사업의 지원대상, 요건, 지원 내용 등을 명시적으로 정한 법 규정의 미흡으로 취성패 사업의 지속성 여부와 지원규모가 해마다 불투명하여 구직자 및 민간위탁 기관의 안정적 참여가 어렵고, 취업취약계층이 취성패에 참여하는 동안 소득이 발생이 되지 않아 생계유지를 위한 부담이 커 구직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문제, 또 우선 소득이 발생하는 일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로 취업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함. 또한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로 낮은 상담 만족도와 제한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의 문제들이 지적되며 한계에 직면함.[4)]

○ 이에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저소득층 구직자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1차로 진행하여 구직자 수요에 맞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을 완료할 경우 구직활동 기간 중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인 한국형 실업부조가 2017년 국정과제로 채택됨.

- 통상적인 실업부조의 경우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특정 조건 없이 현금급여를 제공하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활동 계획을 이행할 경우 6개월의 한정된 기간 동안 현금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수식어가 붙음.
-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으로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과 저소득 실업자를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으로 통합하고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 제도를 갖추게 됨.

---

3) 이병희(202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2차 고용안전망 역할 강화”, 노동리뷰 12월호, p36~37.
4) 고용부 보도자료(2019.5.23.), “취업성공패키지 10년, 그간의 공과”.

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경과

□ 제도의 개요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적 근거[5]에 의해 한국형 실업부조를 포함하여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을 통합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제도로 고용안전망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2021년 1월 시행됨.

- 제도의 기본방향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는 것임.

○ 제도의 기본 틀은 저소득 구직자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6개월)을 지급하는 Ⅰ유형과 취업취약성이 높은 구직자에게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 정비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나누어 운영함.

- Ⅰ유형 중 요건심사형은 연령(15~69세), 가구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재산(3억 원 이하),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면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권리로 받을 수 있음. 이때 청년은 18~34세로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지원함.
- Ⅰ유형 선발형 중 비경활은 경력단절여성과 같이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량지출을 통해 지원하도록 함.
- Ⅰ유형 선발형 중 청년은 2019년부터 실시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6]을 대체한 것으로 기존의 '자기주도적인 취업준비'를 배제하고 상담사와

---

5)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2020.6.9. 제정, 2021.1.1. 시행).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C%EC%A7%81%EC%9E%90%EC%B7%A8%EC%97%85%EC%B4%89%EC%A7%84%EB%B0%8F%EC%83%9D%ED%99%9C%EC%95%88%EC%A0%95%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1.12.4. 인출.

6)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18~34세)에게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졸업 및 중퇴 후 2년 이내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속하는 청년으로 생애 1회 지원함. 월 50만 원 씩 6개월 지원하며, 지원 중 취업 시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협의하여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제도로 변경함(이병희, 2021: 37).

- Ⅰ유형은 상담사와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직업훈련·일경험 및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해야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됨.
- Ⅰ유형을 통해 취업할 경우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한 이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 원 지급[7]하고, 조기재취업 시 인센티브(잔여기간 구직촉진수당×60%)를 부여
- Ⅱ유형은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로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 수급자를 포함), 특정계층(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 없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실비 성격의 취업활동 비용(최대 195.4만 원)을 지원함.[8]

〈표 Ⅱ-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2021년 1월 기준)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지원규모
Ⅰ 유형	요건 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50% 이하	3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25만 명
	선발형	비경활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특례: 120%)	3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20만 명
		청년	18~34세			무관	
Ⅱ 유형	저소득		1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소득제한 없음)	무관	무관	19만 명
	특정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자료: 관계부처 합동자료(2019).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으로 재구성.

7)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의 경우 취업 후 6개월 근속하면 50만 원, 12개월 근속하면 100만 원의 총 150만 원 지급.
8) 1단계(상담 및 진단) 15~25만 원, 2단계(직업훈련 참여) 월 28.4만 원, 최대 6개월 지급.

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은 취업의지와 능력의 정도에 따라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ndividual Action Plain, 이하 IAP)을 상담사와 함께 작성하고 이에 따라 직업훈련 및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음.

- 상담을 통해 〈표 Ⅱ-2〉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지원됨.
- 취업지원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3개월 간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유선상담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하는 사후관리를 지원함.

〈표 Ⅱ-2〉 취업의지와 능력 정도에 따른 유형별 취업지원 방안

	능력 낮음	능력 높음
의지 낮음	① 복지지원+직업훈련, 일경험 연계	② 복지지원을 통한 취업장애요인 해소
의지 높음	③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개발 연계	④ 취업알선을 통한 조기취업

주: ①, ③은 지역·산업별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과정 확대, 기업과 연계한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①, ②는 심리상담, 집단상담을 통한 취업의욕 고취, 금융서비스, 육아서비스 등 지원, ④는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여 구직기술형성 프로그램 및 구인정보 제공

자료: 관계부처 합동자료(2019: 3).

○ 이러한 취업지원제도의 전달체계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이하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대상자의 접근 편의성 제고, 청년·여성에게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입주한 지자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센터 등 전문인력을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담자로 지정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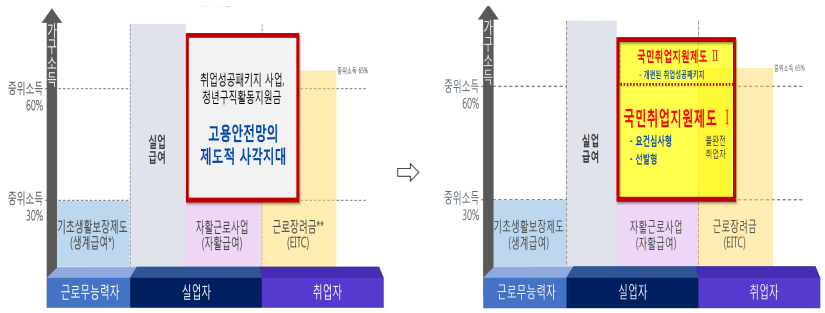
○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시행되면서 고용보험과 함께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근로빈곤층의 고용개선 및 빈곤완화를 기대함.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이전에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60% 수준의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및 빈곤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이들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근로

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빈곤층의 고용개선을 도모했음.

- 그러나 단계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안정화되어 2022년 이후에는 현재의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안전망의 폭을 넓혀 현재보다 두터운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함([그림 Ⅱ-1] 참고).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지원이 목적이며 그중에서도 여성은 특히 빈곤율이 높고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취약한 여성에게 영향을 크게 미칠것으로 예상됨.[9]



〈종전 고용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이후〉

자료: 고용노동부(2022.1.4: 2),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과 및 22년 운영방향」, 보도자료.

[그림 Ⅱ-1]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지향방향

□ 제도 도입 이후 경과[10]

○ 2021년 7월 1일 이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특히 청년층의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함.

- 2021년 6월 29일 기준 약 33.2만 명이 신청하여 약 26.1만 명(Ⅰ유형

9) 오은진 외(2019)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적용받는 잠재적 대상자 중 여성의 규모를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 전체 대상자 추정치의 약 50.8~54.8%가 여성으로 추계됨. 특히 중위소득 기준을 50%에서 60%로 확대하거나 취업기준을 완화할 경우 여성이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기준의 경계를 넓힐수록 여성 대상자가 많아지는 것을 확인함.

10) 이하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7.1.) "국민취업지원제도, 더 큰 고용안전망이 되겠습니다."를 바탕으로 작성함.

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1.4만 명, Ⅱ유형 4.7만 명)이 국민취업지원지원제도에 참여함. 이는 기존 목표인원 60만 명의 절반 수준임.

- 제도시행 과정에서 국민신문고, 고용센터,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경로로 제도의 개선의견을 접수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을 회복하는 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저소득 구직자의 참여요건이 엄격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이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확대하여 2021년 7월부터 적용함.

〈표 Ⅱ-3〉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요건(2021년 10월 기준)

			수급자격요건				소득지원	지원 규모	서비스 제공 기관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Ⅰ유형	요건 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구직촉진 수당: 월50만원 ×6개월	25만 명	고용 센터*
	선발형	비경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5만 명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무관		15만 명	민간 위탁
Ⅱ유형	저소득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취업활동 비용지원	2만 명	고용 센터
	특정			무관				2만 명	민간 위탁
	청년		18~34세					13만 명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주: * Ⅰ유형 수급자 중 약 2만 명은 새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 크게 세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함.

- 먼저 청년의 가구 재산 상한 요건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취업경험이 없거나 있는 경우 모두를 지원함. 이러한 개선의

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유는 청년이 부모와 함께 거주 시 재산요건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임. 또한 재산 요건 완화는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에 따라 3억 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가구가 늘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반영한 조치임.

- 저소득층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재산요건을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함.[11)]
-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2021년 연말까지 영세자영업자의 참여요건 기준을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하여 운영함(Ⅱ유형에 요건에 적용).

○ 2021년 한해 50.9만 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를 신청했고, 42.3만 명이 수급자격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음(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1.4: 2).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Ⅰ유형에 참여한 인원은 총 34.1만 명으로 이 중 청년은 21.1만 명이 참여해 전체의 61.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참여자의 만족도 및 관심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구직촉진수당은 생활비 및 구직활동비에 주로 쓰는 것으로 조사됨. 즉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지원을 비롯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실업부조 본연의 목적에 일정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됨.

□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운영 방향[12)]

○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과 유사한 규모인 60만 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Ⅰ유형 중 청년층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

---

11) 소득·재산요건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은 7.1.~8.10.,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시행

1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2.1.4.)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과 및 22년 운영방향.”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함.

www.kwdi.re.kr KO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하는 방향을 발표함.

- 2022년에는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실화 및 고도화를 통해 취업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이를 위해 ① 참여자의 적극적인 구직노력 지원을 강화, ② 취업역량평가 전면개편, 서비스 표준안 마련 등을 토대로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 ③ 실효적인 일경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을 밝힘.
- 특히 참여자의 적극적인 구직노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취업성공수당구조를 변경하여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함(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한 이후 취업 및 창업을 할 경우 50만 원을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

〈표 Ⅱ-4〉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규모

			2021년 (1.2조원(본예산))		2022년 (1.5조 원)	
Ⅰ 유형	요건심사형		25만 명	40만 명 *추경 5만 명 별도	25만 명	50만 명
	선발형	청년	10만 명 *추경 5만 명 별도		17만 명	
		비경활	5만 명		8만 명	
Ⅱ 유형	특정계층		4만 명	19만 명	1만 명	10만 명
	청년		13만 명		8만 명	
	중장년		2만 명		1만 명	

자료: 고용노동부(2022.1.4),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과 및 22년 운영방향」. 보도자료.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층 중심으로의 제도개선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2022년 운영방향도 청년 대상 확대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은 22년 이후 방향에 고려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여성 참여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음.

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 참여 실태

□ **국민취업지원제도 DB(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21년 1월부터 11월 15일까지 신청한 자료를 추출하여 운영 실태와 여성 참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신청자 중 여성 신청자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11월 기준 조사된 결과 전체 신청자 수는 46.2만 명이고 이 중 여성은 25.9만 명으로 전체 신청자 중 56.0%가 여성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남.

○ 유형별로 살펴보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는 Ⅰ유형 중 신청자 수가 가장 많은 요건심사형의 여성 신청 비율은 55.4%로 여성 신청자가 약간 많았고, 청년 선발형은 여성이 51.0%로 남성과 여성 신청자가 거의 절반에 가까움.

- 반면, 구직경험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비경활 선별형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참여가 높아 여성 비중이 62.4%로 높게 나타나 다른 유형과 차이를 보임.

○ 취업취약성이 높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Ⅱ유형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연장에서 진행하는 유형으로 청년을 비롯해 저소득, 특정계층, 중장년 유형 모두 여성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중장년은 76.5%가 여성으로 여성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 한편 성별로 신청한 유형 비중을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Ⅰ유형이 거의 대부분(84%)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으며 그중 요건심사형(권리형)으로 신청한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청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경력단절여성 중 구직경험이 없는 경우 비경활 선발형으로 신청한 비중이 높아 여성 비중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 특징이 나타남.
- Ⅱ유형은 신청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지만 청년층과 저소득층 비중이 높게 나타남.

www.kwdi.re.kr KO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표 Ⅱ-5〉 유형별 신청자 수 및 유형 비중

(단위: 명, %)

		신청자 수			유형 비중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전체	남성	여성
Ⅰ 유형	요건심사형	170,091	94,275	55.4	36.8	37.3	36.4
	선발형(청년)	140,154	71,471	51.0	30.3	33.8	27.6
	선발형(비경활)	64,523	40,237	62.4	14.0	12.0	15.5
Ⅱ 유형	저소득층	28,505	16,699	58.6	6.2	5.8	6.4
	특정계층	5,054	3,482	68.9	1.1	0.8	1.3
	청년	39,821	22,114	55.5	8.6	8.7	8.5
	중장년	14,094	10,776	76.5	3.0	1.6	4.2
계		462,242	259,054	56.0	100.0	100.0	100.0

주: 2021년 11월 15일 기준.
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DB,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 **신청자 중 수급자로 선정된 인원의 비율은 신청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여성 수급자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은 발견되지 않음.**

○ 2021년 11월 기준 전체 신청자 중 수급자는 39.2만 명으로 이 중 여성은 22.0만 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절반 이상인 5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여성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및 수급자 비중 모두 높게 나타남.

○ Ⅰ유형과 Ⅱ유형 모두 여성 수급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유형별로 살펴보면, Ⅰ유형 중 요건심사형의 여성 수급자 비율은 55.6%로 신청자 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났고 청년 선발형은 남녀 비율이 유사한 수준인 51.5%로 나타남

- 한편 구직경험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비경활 선별형은 주로 경력단절여성이 대상이 되게 되어 여성의 신청비율이 높았는데 수급자 비율도 비슷한 수준인 61.9%로 높게 나타남.

www.kwdi.re.kr KO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또한 취업취약성이 높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Ⅱ유형의 세부유형 모두 수급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중장년, 특정계층에 여성이 다수 몰리는 것으로 나타남.
- 수급자의 유형비중을 보면, 신청자와 유사하게 남성과 여성 모두 Ⅰ유형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요건심사형〉청년 선발형〉비경활 선발형 순으로 많음.

〈표 Ⅱ-6〉 유형별 수급자 수 및 여성 비율

(단위: 명, %)

		수급자 수			
		전체	남성	여성	여성비율
Ⅰ 유형	요건심사형	136,053	60,421	75,632	55.6
	선발형(청년)	123,642	59,992	63,650	51.5
	선발형(비경활)	58,139	22,143	35,996	61.9
Ⅱ 유형	저소득층	25,540	10,438	15,102	59.1
	특정계층	4,809	1,478	3,331	69.3
	청년	35,204	15,512	19,692	55.9
	중장년	9,211	2,161	7,050	76.5
계		392,598	172,145	220,453	56.2

주: 2021년 11월 15일 기준.
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DB,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 인정률은 남성은 84.7%, 여성은 85.1%로 성별에 차이가 거의 없으며, 수급인정률이 높은 편으로 보임.**

○ 2021년 11월 기준 남성 수급자격 인정자는 17.2만 명, 여성 수급자격 인정자는 22.0만 명으로 여성 수급자가 더 많았지만, 각각 신청자 대비 수급자격 인정률은 84.7%, 85.1%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할 수 있는 Ⅰ유형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신청한 요건심사형의 수급자격 인정률은 남성은 79.7%로 약 6만 명, 여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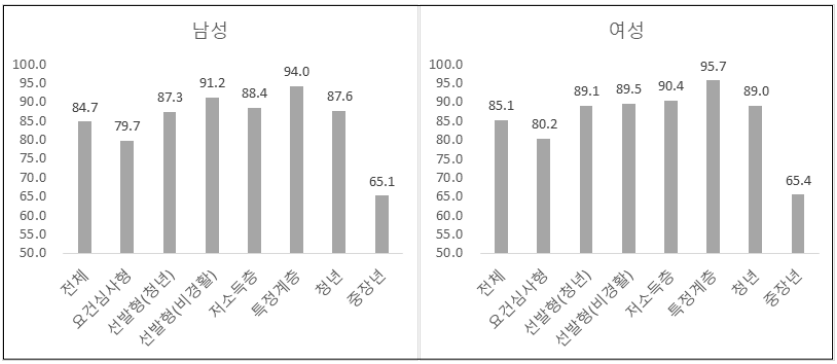
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0.2%로 약 6.4만 명이 수급자격을 인정 받았으며, 여성이 약간 높게 나타남. 그러나 다른 Ⅰ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정률을 보임. 요건심사형은 연령, 가구소득, 가구재산,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면 권리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자가 약 20% 수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됨.

- 반면 Ⅰ유형 중 청년 선발형과 비경활 선발형은 신청자 중 수급자격 인정률이 높게 나타남. 청년 선발형은 남성(87.3%)보다 여성(89.1%)의 인정률이 높은 반면, 비경활 선발형은 남성(91.2%)이 여성(89.5%)보다 높에 나타나 차이를 보임.

○ Ⅱ유형 중 중장년을 제외한 저소득층, 특정계층, 청년층은 수급자격 인정률이 80% 후반 ~ 90% 중반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Ⅱ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없이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지원비가 제공되는데 저소득층,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특정 취업취약계층과 청년의 수급인정률에 비해 중장년은 수급 인정 수준이 65% 수준으로 매우 낮은 특징이 나타남.

(단위: %)



주: 2021년 11월 15일 기준.
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DB,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그림 Ⅱ-2] 성별·유형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인정률

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유형별 수급자의 성별·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65.6%, 여성의 59.6%가 34세 미만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나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이 여성보다 청년층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35~49세 비중이 20.6%로 남성(17.1%)보다 높고, 50~59세 중고령층 비중도 남성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35~59세 수급자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유형별로 보면, Ⅰ유형 중 요건심사형은 34세 미만 청년층 비중이 남성과 여성 모두 절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35~49세는 25% 수준, 50~59세는 13~4% 수준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급자가 적어졌고, 성별 비중도 유사하게 나타났음. 그 외 연령층 비중도 유사하게 나타나 성별 신청자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의 Ⅰ유형 수급자격 심사에는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있어 1인 가구의 청년이라면 가구소득, 가구재산 등의 요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지 않아 수급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용이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비경활 선발형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35~49세가 48.5%로 절 반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남성 17.7%, 여성 20.0%로 나타나 고령층 수급자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 Ⅱ유형 중 저소득층은 34세 미만 청년층이 거의 절반 수준이며 남성(46.6%)이 여성(44.6%)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저소득층은 35~49세 여성이 29.2%로 남성(19.6%)보다 더 많은 분포를 하고 있어 차이를 보임. 대신 남성 저소득층은 여성보다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높게 나타남. 핵심연령층 남성에서 여성보다 저소득층 대상이 적은 것으로 보임.

www.kwdi.re.kr KO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표 Ⅱ-7〉 성별·연령별 수급자 비중

(단위: %)

		Ⅰ유형			Ⅱ유형				합계
		요건 심사형	선발형 (청년)	선발형 (비경활)	저소득층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남성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4세 미만	52.7	100.0	1.2	46.6	26.9	100.0	0.1	65.6
	35~49세	25.9	-	48.5	19.6	20.2	0.0	33.8	17.1
	50~59세	13.3	-	32.6	15.6	21.2	0.0	26.8	10.3
	60세이상	8.1	-	17.7	18.1	31.7	0.0	39.3	7.0
여성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4세 미만	53.4	100.0	0.8	44.6	21.5	100.0	0.3	59.6
	35~49세	24.6	-	48.5	29.2	34.6	0.0	55.2	20.6
	50~59세	14.0	-	30.5	16.8	25.4	0.0	29.0	12.3
	60세이상	8.0	-	20.2	9.4	18.6	0.0	15.5	7.5

주: 2021년 11월 15일 기준.
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DB,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 반면 결혼이민자나 북한이탈주민 등 특정 취업취약계층의 성별·연령 분포를 보면, 모든 연령계층에 고르게 분포한 편이지만 남성은 60세 이상 고령층에 여성은 35~49세 핵심연령층에 좀 더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취약계층의 구직을 원하는 비취업자의 성별·연령별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중장년층도 남성은 60세 이상 고령층에, 여성은 35~49세 핵심연령층에 더 많이 분포해 유사한 특징이 나타남.

○ 한편 Ⅰ유형 신청자의 약 85%가 수급인정을 받았지만, 약 15%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함. 구직촉진수당의 권리형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로 나타났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 미충족은 여성은 43.9%, 남성은 34.9%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 비경활 선발형에서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두 번째 불인정 사유는 수급 제외 대상임. 즉시 취업 불가, 구직급여 수급 및 수급한지 6개월 미만인 경우 등이 주된 이유인데 남성은 16.3%, 여성은 14.3%로 남성이 높게 나타남. 요건심사형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세 번째 불인정 사유는 근로능력이나 구직의사가 없거나 미취업 상태가 아니라 수급자격을 미충족한 경우로 남성이 9.2%, 여성이 7.6%로 나타남.
- 네 번째 불인정 사유는 가구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남성은 8.1%, 여성은 6.4%로 나타남.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가구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Ⅱ-8〉 성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

(단위: %)

	남성				여성			
	요건 심사형	선발형 (청년)	선발형 (비경활)	소계	요건 심사형	선발형 (청년)	선발형 (비경활)	소계
자격 미충족	9.8	8.5	7.9	9.2	8.0	8.4	4.5	7.6
가구소득 미충족	33.5	35.8	41.6	34.9	41.6	37.8	65.2	43.9
가구재산 미충족	5.6	12.7	7.7	8.1	4.7	11.1	5.6	6.4
취업경험 미충족	0.1	0.2	0.1	0.2	0.2	0.2	0.0	0.2
선발형 요건 미충족	0.8	0.5	0.5	0.6	0.6	0.8	0.2	0.6
수급 제외 대상	19.2	12.4	11.9	16.3	17.5	11.5	5.8	14.3
기타	31.0	30.0	30.3	30.6	27.5	30.2	18.7	27.0
불인정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2021년 11월 15일 기준.
2) 자격 미충족: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 제6조의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요건(구직의사·능력, 연령 등) 미충족
3) 가구소득 미충족: 2021년 6월 이전 가구 중위소득 50% 초과(청년 120% 초과), 2021년 7월 이후 가구 중위소득 60% 초과(청년 120% 초과).
4) 가구재산 미충족: 가구 재산 합계 3억 원 초과(9월 이후 4억 원 초과).
5) 취업경험 미충족: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
6) 선발형 요건 미달: 「구직자지원법」 제7조 제2항
7) 수급 제외 대상: 「구직자지원법」 제7조 제3항 제1호에서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① 군복무, 심신장애, 간병 등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② 기초생활 생계급여

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수급자, ③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끝난 후 6개월 미만인 자, ④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끝난 후 6개월 미만인 자, ⑤ 국가나 지자체에서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받거나 끝난 후 6개월 미만인 자, ⑥ 월평균 총소득이 가구 중위소득의 60% 초과인 자, ⑦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DB,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 정리하면, 남녀 모두 가구소득 및 가구재산 요건의 미충족 비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오은진 외(2019)의 연구결과에서 소득 및 가구재산 기준 요건을 약간 낮출 경우 여성 대상자가 크게 늘어남을 확인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여성이 기준 소득 및 재산의 경계에 몰려 있는 영향으로 보임.

4. 소결

○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의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망을 제공하는 제도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주는 함의가 큼.
- 특히 여성은 빈곤율이 높고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취약한 여성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됨.

○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여성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신청자 및 참여자 중 여성이 더 높은 신청과 참여를 한 것으로 나타남.
- 유형별로 살펴보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는 Ⅰ유형 중 신청자 수가 가장 많은 요건심사형의 여성 신청 비율은 55.4%로 여성 신청자가 약간 많았고, 청년 선발형은 여성이 51.0%로 남성과 여성 신청자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구직경험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비경활 선별형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참여가 높아 여성 비중이 62.4%로 더 높게 나타남.
- 취업취약성이 높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Ⅱ유형은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의 연장에서 진행하는 유형으로 청년을 비롯해 저소득, 특정계층, 중장년 유형 모두 여성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중장년은 절반 이상이 여성으로 여성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 인정률은 남성은 84.7%, 여성은 85.1%로 성별에 차이가 거의 없으며, 수급인정률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 또한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할 수 있는 Ⅰ유형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신청한 요건심사형의 수급자격 인정률은 남성은 79.7%로 약 6만 명, 여성은 80.2%로 약 6.4만 명이 수급자격을 인정 받았으며, 여성이 약간 높게 나타남.
-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는 남녀 모두 소득 및 재산요건의 미충족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오은진 외(2019)의 연구결과에서 소득 및 가구재산 기준 요건을 약간 낮출 경우 여성 대상자가 크게 늘어남을 확인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여성이 기준 소득 및 재산의 경계에 몰려 있는 영향으로 보임.

○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여성 참여자 비율이 높고, 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자 중 여성과 남성 모두 청년층 비중이 높지만 그 외 남성은 고령층, 여성은 핵심연령층 참여가 높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는 여성 청년층을 비롯하여 핵심연령층에 대한 여성 고용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임. 특히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특화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새일센터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데이터의 한계로 더 이상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자료의 한계로 수급자의 성과로 확인할 수 있는 취업으로의 이행률, 수급자격자의 유형별 취업지원 내용, 촉진수당을 위한 이행여부 내용 등의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또한 IAP수립 시 성별로 어떠한 유형을 더 많이 선택했는지를 통해 성별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이와 같은 분석은 추후 자료의 확보 후 향후 과제로 남겨둠.

www.kwdi.re.kr/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III

새일센터의 국민취업제도 운영과 향후과제

1.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여성 고용서비스의 역할 31

2. 새일센터 참여현황 및 문제점 33

3.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새일센터의 향후 과제 45

www.kwdi.re.kr KO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Ⅲ

새일센터의 국민취업제도 운영과 향후과제

1.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여성 고용서비스의 역할

○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 여부는 공공서비스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음. 심층상담에 기초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구직활동 확인 및 불성실 참여자에 대한 제제 등 사례관리와 활성화 조치는 직업상담 전문인력에 좌우될 것임(이병희, 2018: 51).

-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고용서비스와는 달리 수급자격자의 취업역량, 희망직종 등을 감안하여 상담 및 취업준비 내용 등을 취업지원관(상담사)과 협의하여 취업활동계획을 미리 세우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직업상담 전문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
-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업무가 크게 늘어나고, 수당 관련 여러 문제점들을 대응해야 하는 과정에 고용서비스 범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이에 상담사의 업무 부담도 클 것임.
- 게다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에 비해 지원대상자 규모가 크게 늘어 상담사 1인이 담당하는 인원수 및 업무량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됨.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여성고용서비스 전문 기관으로서 새일센터의 역할 및 모습에 대한 선행연구(오은진 외, 2019)는 다음과 같은 강점을 지적하고 있음.[1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www.kwdi.re.kr

- 첫째,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사후관리 사례가 많고, 구직자의 상황에 적합한 상담 기능이 강화되어 있으며 구직자의 성향에 맞는 취업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점이 다른 기관과의 차이점임. 특히 취업 이후에도 멘토링 등의 방법을 통해 현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은 다른 취업연계기관의 사후관리 내용과 차별화된 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둘째,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오면서 여성을 위한 구인 및 구직 서비스에 더욱 특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현재 고용센터 내 입주하고 있는 새일센터의 알선 취업비율이 더 높은 편인데, 이는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직역 내 기업과의 네트워크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음. 향후 이미 형성된 네트워크를 이용한 취약계층 여성의 취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오랜 기간 동안 여성 구직자들과의 관계형성(라포)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취약계층 여성 구직자들이 좀 더 편하게 취업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음. 상담사도 구직자의 초기 상담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구직활동 지원 과정에서도 취업설계사와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구직자와의 신뢰형성이 용이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넷째, 새일센터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단기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고, 집단상담을 통한 집체방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유연한 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 강점이 있음. 따라서 저소득 취약계층 여성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새일센터 자체적으로 개발 및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구직자 수요에 맞는 취업지원서비스에 근접할 것으로 보임.

○ 이와같이 직업상담기능이 강조된 전문상담사의 역할이 중요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여성고용서비스 지원기관으로서 새일센터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저소득 계층의 실업부조

13) 이하의 내용은 오은진 외(2019: 101~104)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상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새일센터의 오래된 노하우 및 모니터링 기능, 상담 기능 등에 대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부각시켜 활용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여성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새일센터 참여현황 및 문제점

가. 새일센터 참여현황과 역할

□ **2020년 12월 30일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연계·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14]

○ 국민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 등 여성 구직자 대상으로 특화되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이하 고용센터)의 연계·협업체계를 구축함.

○ 구체적인 협약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서비스 접점 확대,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공공고용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을 구축하고, 참여하는 기관에 대한 전산망 활용 지원, 인프라·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방안을 강구함.
- 새일센터는 2021년 1월 1월부터 연간 1.9만 명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하며 새일센터 평가 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협업 실적을 반영하고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인센티브를 통해 취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함.

○ 세부적으로는 2021년 기준 전국 새일센터 158개 중 약 70%인 110개의

14)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의 합동보도자료(2020.12.31.) "21.1.1.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와 지자체일자리센터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를 참고하여 정리함.

www.kwdi.re.kr KO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새일센터에서 Ⅰ유형의 국민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하여, 연간 약 1.9만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 특화 직업훈련, 새일여성인턴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이후에도 직장적응 및 고용유지를 위한 개인별 사후관리를 지원하기로 함.

- 이때 고용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한 후 심사를 마친 구직대상자에게 요구되는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후 새일센터 기관으로 연계되는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함.
- 별도의 47개의 새일센터는 심사를 마친 구직자의 취업활동계획(IAP) 수립부터 전담해 여성 참여자에게 특화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함.
- 새일센터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경우 평가지표에 연계지원의 노력을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서비스 제공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을 계획 함.
- 또한 고용센터와 새일센터는 유관기관 운영협의체를 운영하여 정기적으로 논의 및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는 노력을 지속함.

□ 수급자격 심사와 배정 등 지급절차

○ 고용센터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한 수급대상자는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을 고용센터로부터 통보받으며, 수급대상자 판단은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내 수급자격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자격심사관이 진행함.

○ 수급자격이 인정된 참여자는 민간 위탁기관과 고용센터로 나뉘어 배정됨.

- 이때 Ⅰ유형 선발형 청년과 Ⅱ유형 청년 및 중장년층은 민간 위탁기간으로 배정되고, 만약 Ⅰ유형 선발형 청년 중 고용센터로 배정받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고용센터로 배정됨(김혜원, 2021: 55).
- 그 외 수급자격 인정자는 고용센터로 배정됨.

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원(2021)에 따르면 고용센터로 배정된 수급자격자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취업지원관(직업전문 상담사)에게 배정하는지는 명확한 기준이 있지 않고, 센터별로 차이가 있음. 센터에 따라 공무원인 자격심사관이 배정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취업지원관 중 선정된 사람이 배정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 이때 고용센터의 배정업무 담당자가 새일센터로 수급자격자를 배정함.

○ 새일센터는 Ⅰ유형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에 대한 수급자격자를 배정받으며, 3단계인 취업활동계획(IAP)부터 수립하는 경우와 취업활동계획(IAP)을 모두 수립한 이후인 4단계부터 진행하는 경우가 있음.

- 4단계부터 시작하는 새일센터의 취업지원관은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한 수급자격 인정자를 고용센터로부터 배정받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 이 경우 새일센터에서는 이미 수립된 IAP에 따라서 배정받은 대상자에게 상담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IAP에 따른 구직활동이행 및 이행결과에 따른 서류 및 행정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이 과정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지속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고용센터로 보고하는 절차를 거침.
- 반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는 3단계부터 진행할 경우 고용센터로부터 수급자격자를 배정받아 취업활동계획(IAP)을 당사자와 협의하여 수립한 후 4단계 이후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함.
- 이때, 취업활동계획(IAP)부터 진행할 경우 고용센터로부터 배정받은 인원 수의 절반을 줄여줌. 즉 만약 80명의 수급자격자를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는 3단계부터 진행했다면 이를 160명으로 인정해주는 셈임.
- 상담사들은 이러한 유인책이 있어 취업활동계획(IAP) 수립부터 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하고, 수급자격자와 관계형성에 필요한 지점이라는 인식이 있어 상담사들이 원하기도 함.
-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은 새일센터 모두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님.

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표 Ⅲ-1〉 수급자격 및 배정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수급자격 신청	수급자격 확인·조사 및 수급자격 결정통지	취업활동계획 수립[1)]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사후관리

주: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의 참여의무를 부과하여 수급자격자와 협의를 통해 수립.
자료: 관계부처합동(2019.6.4). 보도자료.

□ 새일센터 참여 현황[15)]

○ 2021년 10월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새일센터는 총 110곳이며, 1개의 새일센터에서 여러 고용센터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총 138곳의 고용센터와 연계되어 참여하고 있음.

- 주로 1개의 고용센터와 1개의 새일센터가 연계되어 있지만, 지역 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광역새일센터를 중심으로 2개 이상의 고용센터와 연계되는 경우가 있음.
- 특히 경남광역새일센터의 경우 8개의 고용센터(창원, 통영, 밀양, 하동, 거창, 함안군 중형, 창녕군 중형, 고성군 중형)와 연계되어 가장 많은 연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15) 여성가족부에서 2021년 10월 새일센터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연계 및 협업 현황을 전수조사한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중앙새일센터 제공).

www.kwdi.re.kr KO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표 Ⅲ-2〉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새일센터

(단위: 개소)

연계 고용센터 수		고용센터와 연계된 새일센터
1개의 고용센터	98	강릉, 강서, 거제, 경남산단, 경산, 경주, 계양, 고양, 공주, 광명, 광양, 광주광산 산단, 광주북구, 광주, 구로, 구리, 구미, 군산, 군포, 김제, 김천, 김포, 김해, 김해시동부, 나주, 남양주, 남원, 논산, 당진, 대구, 대구신달서, 대전광역, 대전, 동래, 동해, 마산, 목포, 보령, 부산광역, 부산사하, 부산, 부여, 부천, 삼척, 서산, 서천, 성남, 세종, 송원대, 송파, 수성, 순천, 시흥산단, 아산, 안산, 안양, 양산, 양주, 여수, 영월, 영주, 영천, 오산, 용산, 울산, 원주, 은평, 의왕, 의정부YWCA, 이천, 익산산단, 인천광역, 인천남동산단, 인천남동, 인천서구, 전북, 전주, 정읍, 제주, 제천, 종로, 중부, 진주, 창원, 천안, 청주, 춘천, 충주, 칠곡, 파주, 팔달, 평택, 포천, 포항, 해운대, 홍성, 화성, 화순
2개의 고용센터	5	경기북부광역, 전북광역, 대구남부, 대구달서, 영암
3개의 고용센터	4	강원광역, 전남광역, 충남광역, 충북광역
5개의 고용센터	2	경기광역, 경북광역
8개의 고용센터	1	경남광역
참여 고용센터	110	

자료: 중앙새일센터, 내부자료.

○ 새일센터와 연계된 고용센터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지역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남, 경북, 충남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서울은 새일센터가 총 26곳으로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7곳의 고용센터와 연계되어 연계된 수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www.kwdi.re.kr

〈표 Ⅲ-3〉 새일센터와 연계된 고용센터 분포

(단위: 개소, %)

지역	새일센터와 연계된 고용센터 수	
전체	138	100.0
강원	9	6.5
경기	28	20.3
경남	15	10.9
경남	1	0.7
경북	13	9.4
광주	4	2.9
대구	7	5.1
대전	2	1.5
부산	5	3.6
서울	7	5.1
세종	1	0.7
울산	1	0.7
인천	5	3.6
전남	11	8.0
전북	9	6.5
제주	1	0.7
충남	13	9.4
충북	6	4.4

자료: 중앙새일센터, 내부자료.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138개의 고용센터와 연계된 새일센터 전담자의 근무형태는 주로 새일센터에서 고용센터로 1인을 파견하는 경우가 92곳으로 가장 많았고, 2인을 파견한 경우 8곳, 요일제로 일부 파견하는 경우가 14 곳으로 파견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18곳의 고용센터 내 전원 입주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는 총 14곳으로 김포, 남양주, 파주, 양주, 의왕, 구리, 경기광역(4곳 연계), 원주, 영월, 충주, 서산, 아산, 광양, 경산새일센터임.
- 그 외 6곳의 새일센터에서는 파견하지 않고 새일센터 내에서 근무한다고 응답함.

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표 Ⅲ-4〉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새일센터의 근무형태

(단위: 개소)

근무형태	새일센터와 연계된 고용센터 수
고용센터로 1인 파견	92
고용센터로 2인 파견	8
고용센터로 일부 파견(요일제)	14
고용센터 내 전원 입주상태	17
새일센터에서 근무	6
무응답	1
전체	138

자료: 중앙새일센터, 내부자료.

나. 연계·협업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16)]

□ 고용센터에서 새일센터에 연계하는 건수 부족 문제

○ 2021년 새일센터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고용센터에서 새일센터로 대상자를 연계하는 건수에 부족함을 느끼는 새일센터는 절반 수준(53.1%)으로 나타남.

- 연계 건수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지역 간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응답한 지역에 새일센터가 1곳인 세종과 제주를 제외하고 대구〉부산〉전북〉충남〉전남〉경기〉서울 순으로 연계 건수 부족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연계 건수가 부족하다는 응답의 주된 사유는 크게 세 가지(참여자 부족, 관계형성 부족, 소통 부족)로 나타남.

- 첫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자체가 저조하거나 연계가 적합한 여성 참여자의 부족 문제임.
- 둘째, 이미 IAP수립을 마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할 경우 참여자와의 관계형성(라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연계 동의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16) 여성가족부에서 2021년 11월 새일센터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연계·협업 관련 애로사항을 전수조사한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중앙새일센터 제공).

www.kwdi.re.kr KO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적됨. 이는 여성의 경우에서 더욱 드러나는 문제로 보임.

- 고용센터 내 배정담당자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고용센터의 연계 지연으로 인한 건수 부족상황이 발생함.

○ 한편 울산, 광주, 대전, 인천의 경우 연계 건수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0.0%로 연계에 대한 어려움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임.

〈표 Ⅲ-5〉 연계 건수 부족함 여부

(단위: 개소, %)

지역	부족함	부족하지 않음	부족비율
전체	69	61	53.1
강원	4	5	44.4
경기	13	9	59.1
경남	4	10	28.6
경남	0	1	0.0
경북	7	6	53.8
광주	0	4	0.0
대구	6	1	85.7
대전	0	2	0.0
부산	4	1	80.0
서울	4	3	57.1
세종	1	0	100.0
울산	0	1	0.0
인천	0	5	0.0
전남	7	4	63.6
전북	7	2	77.8
제주	1	0	100.0
충남	8	4	66.7
충북	3	3	50.0

자료: 중앙새일센터, 내부자료.

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업무 수행인력의 부족(내부 행정업무의 과다함)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내부 행정업무의 과다함의 이유를 포함하여 수행인력의 부족을 느낀다는 응답은 전체 131센터 중 54.2%가 응답함.

- 수행인력의 부족함을 가장 크게 느끼는 근무형태는 전원입주 형태로 응답한 센터의 86.7%가 인력부족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고, 뒤이어 요일제 등 일부 파견형식으로 근무하는 경우 78.6%로 높게 나타남.
- 반면 2인을 파견한 경우 부족하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적은 11.1%로 나타났고 새일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이 40.0%로 상대적으로 적음.
- 가장 많은 근무형태를 보인 1인 파견의 경우는 절반 수준(51.2%)에서 인력부족 및 행정업무의 과다함을 표현함.

○ 전원입주 및 일부파견에서 수행인력의 부족함에 대한 응답이 높은 주된 이유는 새일센터에서 기존에 하던 업무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병행함으로 인한 어려움이 응답의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기존 새일센터의 업무가 전혀 줄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자를 병행하거나, 센터 내 상담원 1인 이상이 취업지원서비스를 전담으로 하면서 다른 상담원에게 새일센터의 업무가 몰리는 상황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추가 인력이 유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가 가중된 것으로 보임.

○ 게다가 1인파견 근무형태인 새일센터에서 수행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애로사항으로 응답한 경우 상당수도 구직상담 및 새일센터 업무 병행으로 시간이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센터별로 추가 인력 없이 업무가 추가로 가중된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새일센터의 상담원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위한 전담인력으로 고용센터로 파견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새일센터에서 진행하던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임. 전담인력에 대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www.kwdi.re.kr

업무배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 수행인력부족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센터에서는 주로 연계 건수가 적절하거나 부족한 상황인 곳으로 구직 대상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이룸.

〈표 Ⅱ-6〉 수행인력부족(내부 행정업무 과다함)

(단위: 개소, %)

근무형태	부족함(업무과다)	부족하지 않음	부족비율
전체	71	60	54.2
1인파견	43	41	51.2
2인파견	1	8	11.1
일부파견	11	3	78.6
전원입주	13	2	86.7
새일센터	2	3	40.0
무응답	1	2	33.3

자료: 중앙새일센터, 내부자료.

□ 연계 업무절차의 불명확 또는 개선의 필요

○ 총 131개 센터에서 고용센터와의 연계하는 과정에서 업무절차의 불명확함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는데 이 중 61.1%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을 보임.

- 연계 업무절차의 불명확함을 느끼고 있는 센터 중 요일제 등으로 일부 파견의 근무형태인 곳의 불명확함 비율이 71.4%로 가장 높았고, 전원 입주가 66.7%, 새일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60.0%, 1인 파견형태가 59.5% 수준으로 새일센터 전담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절차가 불명확함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반면 2인 파견형태가 55.6% 가장 적은 수준의 부정적 응답을 함.

○ 연계 업무절차의 불명확함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의 사유는

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다양하지만, 몇 가지 비슷한 내용의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음.

- 시스템 권한 접근제한의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호소함. IAP 수립이 완료된 수급대상자를 배정받더라도 직업훈련등록, 출석률 확인, 취업확인 등은 HRD 내부망, 바로원, 고용보험 등에 전산조회권이 없어 확인할 때마다 고용센터 직원에게 부탁하여 조회 및 출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게다가 고용센터에 관련 정보 조회 및 등록의 담당자를 정해놓지 않는 경우가 있어 업무 절차상 어려움을 호소함.
- 기존 상담 및 취업지원서비스에 비해 업무절차가 복잡한 편인데 특히 1인 파견으로 혼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담 및 취업지원서비스, 행정처리 등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상의할 수 있는 동료가 없어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느낌. 게다가 명확한 업무지침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의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제도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무체계가 갖춰지고 있지만, 업무 매뉴얼이 복잡하고, 잦은 지침 변동으로 혼선이 생김.

〈표 Ⅱ-7〉 연계 업무 절차의 불명확

(단위: 개소, %)

근무형태	불명확함	명확함	불명확 비율
전체	80	51	61.1
1인파견	50	34	59.5
2인파견	5	4	55.6
일부파견	10	4	71.4
전원입주	10	5	66.7
새일센터	3	2	60.0
무응답	2	2	50.0

자료: 중앙새일센터, 내부자료.

□ 국민취업지원시스템의 이용 불편

○ 국민취업지원시스템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지에 대한 응답을 한 130개의 센터 중 82.2%가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해 상당수의 센터에서 시스템

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사용에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으로 보임.

- 거의 모든 근무형태에서 80% 이상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1인 파견을 제외한 모든 근무형태에서 1~2개 센터를 제외하고 모든 센터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국민취업지원시스템의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새일센터 계정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계정이 분리되어 취업알선 및 구직신청을 위해 각각 접근할 때마다 로그아웃 및 재로그인이 필요하는 불편함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두 계정을 동시에 로그인이 되는 방향 혹은 계정 통합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 분리계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 소요 및 업무효율 저하의 어려움이 큰 상황으로 보임.
- 시스템 권한의 접근 제한으로 구직자의 행정서류 처리 및 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새일센터 종사자의 경우 접근이 불가능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고용센터 직원에게 요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큼.
- 유관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접근 권한의 확대가 필요함.

〈표 Ⅱ-8〉 국민취업시스템 어려움

(단위: 개소, %)

근무형태	어려움	어렵지 않음	어려움 비율
전체	106	23	82.2
1인파견	67	17	79.8
2인파견	8	1	88.9
일부파견	13	1	92.9
전원입주	13	2	86.7
새일센터	4	1	80.0
무응답	1	1	50.0

자료: 중앙새일센터, 내부자료.

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기타

○ 위와 같은 범주로 조사하지는 않았으나 센터 내 기타 의견으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사항으로 여성 수급대상자 배정과 관련하여 사전 논의 없이 무작위로 배정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이는 새일센터의 특화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전문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또한 어떤 대상자를 배정하는 데 협의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협의체를 통해 새일센터와의 연계 대상자의 기준마련이 필요함. 새일센터 주요 타깃층인 30-40대 경력단절여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함.

○ 또한 고용센터와의 적극적인 사례 및 매뉴얼을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하는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실제 상담과정에서 매뉴얼대로 되지 않는 사례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사례공유,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함.

○ 무엇보다 새일센터 연계 취지에 맞게 진행하기보다는 고용부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역할로 그치고 있음을 다수의 새일센터에서 지적하고 있음.

○ 고용센터 상담사는 인센티브가 있거나 지자체는 연간 연계목표를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새일센터는 목표를 할당받고 평가도 받고 있어 타기관과 동등한 위치에서 연계협업의 필요성이 있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새일센터 종사자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있음.

3.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새일센터의 향후 과제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라 저소득층 여성고용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됨

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직업상담기능이 강조된 전문상담사의 역할의 중요성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여성고용서비스 지원기관으로서의 새일세터의 역할이 중요함.

- 특히 경력단절여성과 결혼이민여성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특화된 상담 및 취업지원서비스의 기능을 갖춘 새일센터는 여성 특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강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하여 여성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11월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여성 참여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지원자와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고, 특히 지원자가 가장 많았던 Ⅰ유형 요건심사형의 경우 여성의 73.8%가 핵심연령층(35~49세)으로 대다수가 몰려있는 상황임.

- 또한 선발형에서도 여성의 참여 및 수급비중이 높고, 35~49세가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어 경력단절여성 특화 공공고용서비스가 필요함.

□ **여성특화 고용서비스의 체계화 및 개선이 필요함**

○ 이와 같은 분석결과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지에 맞는 여성 특화 고용서비스의 체계화가 필요함.

○ 그러나 현재의 연계·협업과정에서 몇 가지 애로사항 및 문제점이 드러남.

- 먼저 연계 건수의 부족의 문제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더라고 이미 IAP수립을 마치고 취업지원을 할 경우 참여자와의 관계형성이 어려워 연계 동의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또한 추가 인력이 유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원입주 및 일부 파견, 1인 파견의 근무형태를 하고 있는 새일센터는 기존 새일센터 업무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업무의 과다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근본적으로는 시스템 접근 권한에 제한의 문제로 파생되는 애로사항이 발생하였는데, 새일센터 담당자의 HRD 내부망, 바로원, 고용보험 등에 전산조회권이 없는 문제로 행정처리의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www.kwdi.re.kr KO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새일센터 계정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계정이 분리되어 취업알선 및 구직신청을 위해 각각 접근할때마다 로그아웃 및 재로그인이 필요하는 불편함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 대상자 배정에 관한 협의체 없이 배정을 받는 상황에서 새일센터의 특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고용센터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는 아쉬움이 있음.
- 마지막으로 동일한 업무를 하는 새일센터 전담인력의 인건비 및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타 기관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한 성과체계 마련이 필요함. 현재 동일한 국민취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새일센터 전담인력은 다른 민간위탁기관 전담인력에 비해 월평균 기본급이 약 10만 원 가량 차이가 발생하여 다른 위탁기관이나 고용센터에 비해 낮은 수준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새일센터 전담인력의 인건비 보전을 비롯하여 취업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 방식의 성과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새일센터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에 따라 여성 특화 고용서비스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개선방안이 필요함.

- 새일센터로 연계되는 대상자를 설정하는 기준 마련 및 고용센터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고정적인 협의체 운영
- 취업활동계획(IAP)을 완료한 대상자에게 고용서비스만 제공하는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일센터 전담자에게 가급적 많은 참여자의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
- 새일센터 전담자의 행정전산망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새일센터 계정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계정 분리 사용의 어려움 해소하여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 고용센터를 비롯한 타 기관과 동일한 인센티브 및 성과체계 마련

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참고문헌

김종숙, 신선미(20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과 여성근로빈곤의 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혜원(2021). 고용센터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과제, 노동리뷰 2021년 11월호, p47~62.

오은진, 정성미, 노우리, 길현종(2019).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따른 여성고용서비스 발전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병희(2018). 근로빈곤 특성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향, 노동리뷰 2018년 12월호, p35~52.

이병희(202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2차 고용안전망 역할 강화, 노동리뷰 2021년 11월호, p35~4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

고용노동부(2021). 국민취업지원제도 DB,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관계부처 합동자료(2019.6.4).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9.5.23.), “취업성공패키지 10년, 그간의 공과”.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의 합동보도자료(2020.12.31.) “21.1.1.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와 지자체 일자리센터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7.1.) “국민취업지원제도, 더 큰 고용안전망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2.1.4.)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과 및 22년 운영방향.”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2.1.5.), “시행 2년째 맞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확실히 안착시키고 성과를 내겠습니다.”.

중앙새일센터(2021). 내부자료.

www.kwdi.re.kr KO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Abstract

A Study on Female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and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Female Employment Service System

Sungmi Jung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which was implemented on January 1, 2021, is a 'Korean-style Unemployment program' that provides both employment support services and livelihood support for the low-income class, the self-employed, young people, and career-interrupted women who are in the blind spot of the employment safety net. As a system, it was implemented based o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mployment and Livelihood Support for Job Seekers」. After that, the law was amended on July 1 to ease the requirements for young people in relation to property and income requirements and work experience to expand participants.

For low-income job seekers, there is Type I, which provides employment services and KRW 600.000.000 job search promotion allowance (500,000 won per month × 6 months) if income,

www.kwdi.re.kr KO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ousehold wealth, and job experience requirements are met. It is operated by dividing it into Type II, which provides employment support services to high-level specific job seekers without any requirements. At this time, an Individual Action Plain was established, and the duty to search for a job was assigned to monitor the fulfillment of the job-seeking activit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by November 2021, more than half of all applicants and recipients are women. In particular, in Type I, which has the largest number of applicants, 73.8% of women are the prime age group (35-49 years old). In all types, the proportion of women in participation and supply is high, and the 35-49 year olds account for about half, so there is a need for specialized public employment services for women with career interruptions.

The role of professional counselors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success of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In particular, the role of the *Saeil* employment promotion center, an organization that supports women's employment services, is important. In other word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the need for employment services for low-income women is further emphasized. In particular, the *Saeil* employment promotion center, equipped with counseling and employment support services specialized for career-interrupted women and low-income vulnerable groups, has strengths in providing women-specific employment support services.

Research areas: labor·employment
Keywords: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Female Employment Service System

2021 연구보고서(수시과제)-7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여성활용과 여성고용서비스 향후과제

2021년 12월 18일 인쇄
2021년 12월 20일 발행

발행인 : 문 유 경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전화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02-313-7593 (代)

ISBN 979-11-6652-062-4 93330
정가 : 13,000원